

1940년 前後 朝鮮總督府의 ‘新體制’

認識과 兵站基地強化政策

—總督府 經濟支配시스템의 特質과 관련하여

方 基中

延世大學校 史學科

1. 머리말

1937년 7월 日帝는 軍部 주도 아래 중국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나아가 전쟁이 장기화되자 國家總動員體制를 구축하면서 식민지·점령지를 포괄하는 日滿支 円블록 생산력확충계획과 전시경제통제를 통해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동원체계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주지하듯이 조선총독부는 1938년 9월 대규모 특별자문기구인 時局對策調查會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세에 조응한 병참기지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병참기지정책은 宇垣一成 총독기 이래 南次郎 총독 부임 초기까지 조선의 산업개발정책으로 추진된 農工併進政策을 전시에 조응하여 재편한 것이라는 성격을 띠면서도 총독부 최초의 생산력확충계획을 수반한 점에서 이후 南次郎 재임기 총독부 경제정책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정책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병참기지정책 천명 직후인 1938년 11월 제 1차 近衛內閣의 ‘東亞新秩序’ 성명과 함께 일본 ‘革新勢力’이 주도하는 全體主義 體制革新論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정계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나아가 1939년 9월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에 의해 생산력확충계획과 물자동원이 어려워지자 체제혁신론은 日滿支블록을 남방까지 확대하는 ‘大東亞新秩序’ 건설, 곧 大東亞共榮圈論과 결합되어 더욱 확산되었다. 이른바 ‘新體制運動’이었다. 그리고 이는 1940년 7월 제 2차 近衛內閣이 수립되고 ‘신체제’ 수립을 천명한 「基本國策要綱」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리하여 1941년 전반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치세력 내부의 격렬한 갈등과 타협을 거쳐 ‘정치신체제’, ‘경제신체제’ 등 각 부문별 정책요강이 정리됨으로써 일본파시즘체제로서의 ‘신체제’가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신체제’ 수립 과정이 총독부와 재계 등 조선 지배층 내부에 심각한 危機意識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총독부와 재계는 ‘신체제’의 체제혁신 논리가 조선의 정치·경제지배시스템의 존재양식이나 병참기지정책의 전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대응책에 부심하였다. 말하자면 총독

1 河合和男·尹明憲, 『植民地期の朝鮮工業』, 東京: 未來社, 1991; 川北昭夫, 「1930年代朝鮮の工業化論議」, 『朝鮮近現代史』, 東京: 明石書店, 1996;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서울: 혜안, 2004.

부를 정점으로 한 조선의 지배세력 역시 ‘신체제’ 수립을 둘러싼 일제 지배세력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갈등구조의 한 極을 이루고 있었다. 총독부의 대응책은 ‘朝鮮新體制’의 구축과 병참기지강화정책으로 나타났지만, ‘신체제’ 수립기 이러한 총독부의 위기의식과 그 대응 과정은 병참기지정책의 구조적 특질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러한 총독부의 위기의식의 소재와 구조, 그 대응 과정에 나타나는 兵站基地強化政策의 論理와 特質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².

이러한 분석 목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병참기지정책의 기획·운영 주체인 總督府 經濟支配시스템의 實狀 파악 문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농공병진정책에서 병참기지정책에 이르는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官僚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官治主義’ 지배구조 아래 총독부와 독점자본이 강인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³. ‘신체제’에 대한 총독부의 위기의식은 이 경제지배시스템의 작동구조, 그 내면의 정치적·계급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체제’에 대응하여 병참기지정책을 강화하는 총독부의 입장과 정책논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경제지배시스템의 구체적인 실상 파악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1940년 10월 총독부가 병참기지강화정책의 ‘參謀本部’로서 설치한 國土計劃委員會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았다. 다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여기에서는 국토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개괄적 정리 수준에서 이 시기 경제지배시스템의 특질을 살피는 데 그치고자 한다.

2. ‘新體制’ 樹立期 朝鮮總督府의 危機意識과 그 所在

1940년 8월 1일 제 2차 近衛內閣이 國策의 신방향과 국가체제의 혁신을 규정한 「基本國策要綱」을 발표하였을 때 조선총독부는 그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어느 재조선 일본인이 “일본의 新體制가 조선과 無關係에 있는 것 같이 냉담히 취급하는 것은 뜻밖”⁴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이러한 분위기는 총독 南次郎이 9월 5일 ‘신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거의 한달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례적인 총독의 태도와 관련 분위기는 곧 총독부 내부에 ‘신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체제혁신 논리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게 유포되어 있었고, 또한 ‘신체제’ 수립을 둘러싼 일본정계 동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부심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近衛內閣이 「基本國策要綱」에서 표방한 ‘신체제’ 수립의 國策 목표는 제 2차 세계

2 최근 필자는 이 시기 조선지식인의 ‘전체주의 경제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추이를 개괄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방기중,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 방기중 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혜안, 2005), 본 연구는 이 논지를 보충·확대한 것임을 밝혀둔다.

3 高橋龜吉, 『現代朝鮮經濟論』, 東京: 千倉書房, 1935, 135-139 쪽; 鈴木正文, 『朝鮮經濟の現段階』, 京城: 帝國行政學會朝鮮本部, 1938, 92-96 쪽; 堂本敏雄, 「朝鮮行政の特質」, 『朝鮮行政』19-4, 1940. 4, 21 쪽.

4 原猛彦, 「新興亞體制下に於ける朝鮮の使命」, 『朝鮮』1940. 12, 90 쪽.

대전 발발 이후 세계 경제블록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난관에 처한 생산력확충과 물자 동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八紘一宇’의 ‘肇國大精神’에 기초하여 國防國家體制를 완성하고 ‘大東亞新秩序’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신체제’ 수립은 이 기본 국책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정치·경제체제의 혁신을 뜻하였다⁵. ‘신체제’ 시안 작업을 주도한 일본 企劃院 ‘革新官僚’가 강조한 바와 같이 ‘신체제’가 추구하는 國防國家는 “정치가 경제를 지도하고 국무와 통수가 일체화된 전체주의적 국가”로서, 「基本國策要綱」은 일본국가를 “자유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국방국가로서의 건설 강령을 천명한 것”이었다⁶. 곧 「基本國策要綱」은 近衛文麿를 중심으로 ‘신당운동’, ‘신체제운동’을 전개한 ‘혁신세력’의 全體主義 체제혁신 논리와 이념을 국책화한 정책 강령이었다.

‘혁신세력’이 강조한 체제혁신 논리의 요점은 기존 現狀體制를 자유주의 정당정치와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형성된 부패한 特權體制로 간주하고 이 현상체제를 고수하는 ‘現狀維持勢力’을 타파하여 ‘신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었다⁷. 이와 관련하여 ‘혁신세력’이 체제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은 일본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전체주의적 재편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체제, 곧 ‘經濟新體制’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동아경제협동체 건설과 국방국가체제 완성은 이러한 자본주의체제의 전체주의적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체주의 ‘경제신체제’를 실현하는 政策原理는 첫째 개인의 이익을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公益優先主義’ 원칙, 둘째 국가의 전면적 경제통제와 종합적 계획경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경제에 대한 政治 優位와 指導者原理’ 원칙, 셋째 생산력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 ‘勞資一體의 協同主義’ 원칙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혁신세력’은 公益優先·滅私奉公·職役奉公 정신을 전체주의 경제윤리로 강조하였고, 자유주의 이윤사상·개인영리사상과 공산주의 계급투쟁사상을 모두 배격하는 가운데 전체주의 경제체제가 反資本主義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역설하였다⁸.

「基本國策要綱」에 천명된 ‘경제신체제’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체주의 경제체제혁신론의 이념과 정책원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경제신체제’의 구체적 실천요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革新勢力’, 재벌을 포함한 既成勢力, ‘觀念右翼’ 상호간

5 ‘政治新體制’의 기본 방침으로는 관민협력 일치와 국가에 대한 職役奉公을 기조로 하는 新國民組織·議會翼贊體制·官界新態勢 확립 등이 표방되었고, ‘經濟新體制’의 기본 방침으로는 日滿支 경제결합을 근간으로 남방을 포괄한 대동아협동경제권의 확립, 관민협력에 의한 계획경제의 수행, 생산·배급·소비를 관통하는 일원적 통제기구의 정비, 종합경제력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계획과 금융통제 강화, 종합국력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토개발계획의 확립 등 모두 9개 기본 요목이 설정되었다. 「基本國策要綱」원문은 企劃院研究會, 『國防國家의綱領』, 東京: 新紀元社, 1941, 18-20 쪽 참조.

6 企劃院研究會, 위의 책, 31 쪽, 34 쪽.

7 企劃院研究會, 위의 책, 7-12 쪽.

8 체제혁신 논리에 입각한 전체주의경제론, 경제재편성론에 대해서는 秋澤修二, 『合理的全體主義』, 東京: 白揚社, 1940; 勝田貞次, 『日本全體主義經濟の性格』, 東京: 實業之日本社, 1940; 笠信太郎, 『日本經濟の再編成論』, 東京: 中央公論社, 1939 등 참조.

에 격렬한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었고, 결국 「經濟新體制確立要綱」은 ‘혁신세력’의 주장이 현저히 후퇴된 가운데 군부 주도 아래 제 세력간의 타협과 절충을 거쳐 최종 확립되었지만⁹, 「基本國策要綱」 발표 단계에서 ‘혁신세력’이 관철시키고자 한 실천요강의 목표와 방침은 그 관념적 본질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배질서·이해관계와 심하게 충돌하는 것이었다.

총독부가 ‘신체제’에 일종의 危機意識이라 해도 좋을 불안감과 거부감을 보인 것은 이와 같이 「基本國策要綱」에서 표방된 ‘신체제’의 전체주의가 급진적 체제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세력’의 전체주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위기의식의 기본 소재는 ‘혁신세력’에 대한 사상적 거부감과 함께, ‘利潤思想 排擊’이라는 경제이념 아래 기업과 자본에 대한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그것을 円블록에 대한 일원적 통제강화로 확대하고자 하는 全體主義 經濟再編成論에 있었다. 총독부 관료들은 체제혁신적 경제재편성론이 병참기지정책의 존립 기반과 발전 전망을 위협하고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병참기지정책의 발생사적 성격, 그 구조적 특질과 관련하여 병참기지정책이 체제혁신적 경제재편성론과 상호 심각한 對蹠性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듯이 兵站基地政策은 일본정부가 국책으로 추진하는 日滿支 円블록 생산력확충계획의 일환이 아니라 총독부 차원의 植民地 生産力擴充計劃이었다. 일본정부는 여러 이유에서 병참기지정책을 인정하고 총독부에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였지만 병참기지정책에 일만지 생산력확충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의미와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참기지정책의 생산력확충계획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은 기본적으로 총독부가 직접 마련해야 했고, 그 주요 통로는 일본 獨占資本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수익성을 알리는 ‘朝鮮弘報캠페인’이 요구되었고, 독점자본의 이윤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獨占保護政策이 필요하였다. 이른바 ‘朝鮮特殊事情論’에 입각한 ‘自治統制’의 시행이었다. 이는 이미 宇垣一成의 농공병진정책 단계에서부터 연원하여 병참기지정책 단계까지 시종일관 견지된 총독부 산업개발정책의 기본 정책논리였다¹⁰. 물론 전쟁이 장기화되고 국가총동원체제와 전시경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독점보호와 성격을 달리하는 각종 유통부문에 대한 國家統制가 시행되었지만, 이 역시 일본법규의 직접 적용이 아니라 ‘자치통제’ 형식과 총독 권한을 통해 조선 독자적인

9 「經濟新體制確立要綱」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企劃院研究會, 앞의 책, 52-79 쪽; 宮島英昭, 「戰時經濟下の自由主義經濟論と統制經濟論」, 『日本近現代史 3: 現代社會への轉形』, 東京: 岩波書店, 1993; 방기중, 앞의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 83-86 쪽; 柴垣和夫, 「經濟新體制」と統制會—その理念と現實—, 『ファシズム期の國家と社會 2戰時日本經濟』,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9 등 참조.

10 방기중, 앞의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鈴木正文, 「現代朝鮮經濟機構の特異性」, 『朝鮮及滿洲』 374, 1939. 1; 尾關路文, 「農工併進政策の意義と將來」, 『外地評論』 2-12, 1939. 8; 鈴木正文, 「朝鮮統治の現段階」, 『外地評論』 2-12, 1939. 8; 鈴木正文, 「朝鮮における經濟統制の推移」, 『東洋之光』, 1939. 11; 堂本敏雄, 「大陸兵站基地小論」, 『朝鮮』 296, 1940. 1; 本田秀夫, 「工業朝鮮の周知策小見」, 『朝鮮』 299, 1940. 4.

입장에서 시행되었다¹¹.

요컨대 독점자본과의 결합에 기초한 산업개발·생산력확충 논리와 제도적인 독점보호 장치로서의 '자치통제' 방침은 병참기지정책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총독부의 산업개발·생산력확충의 주관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치통제'는 그 자체 日滿支블록에 대한 조선의 종속적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한 일본 독점자본과 기술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치통제'의 작동구조에는 총독부 官權과 獨占資本의 유착관계·이해관계가 집중 반영되어 있었다. 체제혁신 논리의 '이윤사상 배격'과 일원적 통제강화 방침은 이러한 병참기지정책의 논리와 물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나아가 체제혁신 논리는 이러한 유착관계·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병참기지정책의 개발 논리와 '자치통제'를 관철시키고 있는 총독부 '官治主義' 경제지배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이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흔히 '官僚統制'라고도 칭하는 '관치주의' 경제지배는 일본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만큼 조선 특유의 사실만은 아니나, 특히 상술한 병참기지정책의 성격이나 '자치통제'의 특질과 관련하여 경제규모가 작은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과 질적 차이를 달리하였다. 관료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총독부 관료의 경제지배와 통제는 "決定的인 力"을 지니고 있었고¹², 그것은 곧 "總督政治의 集權力"을 상징하는 것이었다¹³. '관치주의' 경제지배는 '자치통제'로 표상된 총독정치의 특수성에 의해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총독부 관료는 병참기지정책의 기획주체이자 경제지배시스템의 權力主體로서 군림하였다.

병참기지정책 수립 단계의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정점은 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며 조선을 통치한 총독정치의 특성과 관련하여 당연히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총독 南次郎이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 과정,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해당 주무부서장인 局長과 실무책임자인 課長의 역할이 중요하였다¹⁴. 이들 국장과 과장들이 상호 조율하여 기획·입안된 정책과 의견은 총독부 권력의 수뇌 기구이자 일상적 '最高政策會議'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局長會議를 통하여 총독에게 전달되고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총독의 최종 결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

11 병참기지정책 단계의 '자치통제' 운영과 실상에 대해서는 井坂圭一郎, 「經濟統制の朝鮮における特徴」, 『朝鮮行政』 1941. 9; 金仁鎬, 「太平洋戰爭期(1940~45)日帝의 朝鮮 工業統制와 生産力 擴充」, 『韓國史研究』 90, 1995; 河元鎬, 「日帝末 物價統制政策에 관한 研究」, 『史學研究』 55·56, 1998; 許英蘭, 「戰時體制期(1937~1945)生活必需品統制 研究」, 『國史館論叢』 88, 2000; 배성준, 「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韓國文化』 27, 2001; 松田利彦, 「總力戰期の植民地朝鮮における經濟統制法令の整備と經濟「犯罪」」, 『日本統治下の朝鮮—研究の現狀と課題』 京都: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2003 등 참조.

12 堂本敏雄, 앞의 「朝鮮行政의 特質」, 21 쪽.

13 井坂圭一郎, 앞의 「經濟統制の朝鮮における特徴」, 20-21 쪽.

14 이 시기 총독부 정책 결정 과정과 관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解説, 「朝鮮總督府·組織と人」, 宮田節子 監修,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3)』, 東京: 友邦協會, 2002, 164-167 쪽 참조.

로 보인다¹⁵. 여기에 또한 농공병진정책의 총 기획자로서 조선 산업개발정책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한 宇垣一成과 달리 南次郎은 경제문제에 대한 識見이 부족하였고 大野綠一郎을 비롯한 총독 측근들 역시 경제전문가가 아닌 ‘滿洲系’의 ‘新來種’ 內務官僚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¹⁶, 南次郎 부임 이후 병참기지정책 단계에 이르는 총독부 농공병진정책의 기획 작업에 있어서 경제관련 부서의 국·과장 관료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다.

이와 같이 병참기지정책 수립 단계의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은 총독을 정점으로 하면서 중앙부서의 경제관련 국·과장 관료들에 의해 운영된 바, 이 시기 그 관료진의 구성과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표 1>의 朝鮮總督府時局對策準備委員會 구성 일람이다. 이 기구는 1938년 9월 南次郎이 내외에 병참기지정책 추진을 천명했던 時局對策調查會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1938년 2월 조직된 관료조직으로, 곧 이것이 이 시기 병참기지정책을 준비하고 경제지배시스템을 주도한 관료진의 全貌였다.

준비위원회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委員陣은 국장회의의 멤버인 각국 국장과 관방 소속 과장들로 구성되었고, 병참기지정책의 기획실무와 운영을 담당한 幹事陣에는 위원을 겸한 관방 소속 과장 및 정책 관련 부서의 과장급 관료가 망라됨으로써 이 시기 병참기지정책이 지니는 정책적 의미와 총독부 경제운영과 관련된 관료시스템의 일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 관료진 개인의 면면을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지만, 이 가운데 병참기지정책을 입안하면서 그 기획에 주도적 역할을 한 관료는, 宇垣一成 단계 이래 조선공업화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식산국장 穗積眞六郎을 비롯한 경제관련 부서의 각 局長¹⁷, 그리고 통상적으로 총독부 정책의 입안·정리를 담당하는 官房 소속 과장 및 경제관련 부서의 주요 과장들이었다¹⁸. 이들은 대개 1910 년대에서 20 년대에 걸

- 15 萩原彦三, 穗積眞六郎, 小磯國昭 등에 의하면, 局長會議는 일주일에 2회 개최되었으며, 총독 배석 하에 정무총감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고, 참석자는 각 국장 (부장 포함) 과 관방 소속 과장이었다고 한다. 국장회의는 총독의 의지가 전달되는 場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장을 통해 주무부서의 정책안이나 과장급 관료의 의견이 총독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기구로서, 정책안은 총독에 의해 최종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는 국장의 재량권이 일정하게 부여되고 있었다고 한다 (宮田節子 監修, 위의 책, 166 쪽, 203-204 쪽). 이러한 의미에서 국장회의는 총독이 참석한 일상적인 ‘最高政策會議’ 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 16 방기중, 앞의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계」, 93 쪽; 岡本眞希子, 앞의 解説, 167 쪽.
- 17 穗積眞六郎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국장은 조세전문가인 재무국장 水田直昌, 1920년대 이래 조선 미곡문제의 일인자로 평가된 농림국장 湯村辰二郎 및 宇垣一成 시기 농촌진흥운동에 열성적이었던 전매국장 鈴木壽男 등이다.
- 18 官房 소속 과장들은 총독부의 엘리트 관료들로서 여러 방면의 정책 기획과 입안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핵심 관료는 관방의 수장격인 審議室 수석사무관이었다. 이 시기 수석사무관은 宇垣一成 시기 상공과장으로서 貿易協會 창립의 막후 역할을 하고 각종 통제정책을 주도한 山澤和三郎이었고, 더불어 관방 과장으로서 위원과 간사를 겸한 藤本修三, 丹下郁太郎, 碓井忠平, 井坂圭一郎 등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과 함께 기획실무의 핵심 역할을 하였다고 파악되는 각 부서 과장은 西本計三 (식산국 상공과장), 美根五郎 (농림국 농무과장), 西岡芳次郎 (내무국 지방과장), 大島寅治 (철도국 조사과장), 伊藤泰吉 (경무국 경무과장) 등이었다. 이들 과장은 모두 1938년 9월 개최된 時局對策調查會의 정식 간사로 선임되었다 (표 1 참조). 이상 준비위원회의 위원·간사 관료진의 개별적 면면과 특징에 대해서는 阿部薫, 『朝鮮人物選集』, 京城: 民衆時論社, 1936 第3版이 좋은 참조가 된다.

표 1 朝鮮總督府時局對策準備委員會 구성 일람

(1938. 2. 8)

	姓名	來鮮 年度	現職	姓名	來鮮 年度	現職
委員長	大野綠一郎	1936	政務總監			
委員	大竹十郎	1933	內務局長	水田直昌	1924	財務局長
	穗積眞六郎	1914	殖産局長	湯村辰二郎	1918	農林局長
	宮本元	1920	法務局長	塩原時三郎	1936	學務局長
	三橋孝一郎	1929	警務局長	山田忠次	1920	遞信局長
		1936			1936	
		吉田浩	1932	鐵道局長	鈴木壽男	1932
	山澤和三郎	1919	官房 審議室 首席	松澤龍雄	1936	外事部長
委員兼 幹事	*藤本修三	1916	官房 會計課長	*丹下郁太郎	1922	官房 資源課長
		1923				
	*碓井忠平	1923	官房 人事課長	*井坂圭一郎	1924	官房 文書課長
幹事	山名酒喜男	1929	官房 審議室 事務官	*西岡芳次郎	1921	內務局 地方課長
	柳生繁雄	1923	內務局 社會課長	*奧村重正	1927	財務局 司計課長
	村山道雄	1925	財務局 稅務·關稅課長	山地靖之	1926	財務局 理財課長
	石田千太郎	1922	殖産局 鑛山課長	*西本計三	1921	殖産局 商工課長
	梶川裕	1929	殖産局 水産課長	山下眞一	1914	農林局 林政課長
	井芹正	1920	農林局 林業課長	下飯坂元	1922	農林局 米穀課長
	橋本左太郎	1923	農林局 土地改良課長	*美根五郎	1925	農林局 農務課長
	岸勇一	1926	農林局 農業振興課長	榛葉孝平	1911	總督府 技士
	森浦藤郎	1921	法務局 法務課長	西龜三圭	1924	法務局 兼務
	古川兼秀	1925	警務局 島嶼課長	下村進	1923	警務局 保安課長
	*伊藤泰吉	1925	警務局 警務課長	坂上滿壽雄	1923	遞信局 電氣課長
	小川要次	1925	遞信局 保險課長	*淺原貞紀	1930	遞信局 庶務課長
	佐佐木仁	1936	遞信局 工務課長	岡田修一	1936	遞信局 海事課長
	福田敬之	1937	遞信局 經理課長	森長文	1924	專賣局 事業課長
	木下麟太郎	1928	專賣局 庶務課長	宇野友八	1933	專賣局 鹽蔘課長
	佐藤作郎	1925	鐵道局 營業課長	西崎鶴司	1920	鐵道局 監督課長
	*大島寅治	1922	鐵道局 調查課長	萩原三郎	1925	鐵道局 庶務課長
	江崎義人	1918	鐵道局 技師	福見貞治	1936	鐵道局 工作課長
	*高尾甚造	1922	學務局 學務課長	金大羽		學務局 社會教育課長
	富田直亮		陸軍步兵 小佐	東郷實		海軍 中佐

- 參考文獻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3319, 1938. 2. 10, 敍任及辭令, 121-122 쪽.
安龍植編, 『朝鮮總督府下 日本人官僚 研究』 I·II·III,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貴田忠衛,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 幹事 가운데 * 표시는 1938 年 9 月 개최된 時局對策調查會의 正式 幹事로 選任된 官僚
- 來鮮年度가 중복인 경우는 再來鮮한 것임
- 委員 겸 幹事인 藤本修三은 2. 19. 追加 選任된 경우임

쳐 來鮮하여 장기근속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른바 ‘生拔’ 관료들이었다¹⁹. 조선사정·조선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미 宇垣一成 단계의 농공병진정책 이래 총독부 경제정책을 기획·운영하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경제의 식민지적 지배질서와 제반 일상적 특성을 구축하면서 총독부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을 확립한 권력주체였다²⁰.

이들 관료와 더불어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官治主義’ 특성을 관철시키고 재생산하는데 중추 역할을 담당한 또 다른 권력주체가 財界의 ‘天降組’였다. ‘天降’은 퇴관한 관료가 관변 금융기관이나 특수회사의 사장 또는 중역으로 취임하는 낙하산 인사를 말하는데, 과장급 관료도 일부 있지만 주로 국장 내지 도지사를 역임한 고급관료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은 대개 조선통치에 정통한 장기근속자로서 총독부 권력의 상층부를 형성하였지만 일본으로 승진·귀환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天降’을 이용하여 조선에서 계속 활동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²¹. 총독부 역시 이들을 통해 경제정책을 원활히 운용하고 재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으로써 ‘天降組’는 총독부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天降’은 1918년 총독부 理財課長으로서 조선식산은행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有賀光豊이 식산은행 수석이사로서 취임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표 2>는 그 이후 南次郎 총독 재임기까지의 대표적인 ‘天降組’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齋藤實 총독기인 1920년대의 ‘天降’ 인사는 총독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식산은행을 비롯하여 몇몇 관변 특수회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天降’ 대상자들도 통감부시기에 내선하여 조선식민지화 작업에 참여하고 강점 후 식민지 경제제도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초기 식민지관료 출신들로서, 이른바 ‘朝鮮草分組’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총독부 官界의 長老들이었다.

19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성과이지만, 조선 식민지배정책의 추이와 밀접히 연관된 총독부 官僚陣의 동향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總督政治と政黨政治」,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2000; 木村健二, 「朝鮮總督府經濟官僚の人事と政策」, 『近代日本の經濟官僚』,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000; 李炯植, 「‘文化統治’ 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學雜誌』 115-4, 2006; 李炯植, 「政黨內閣期(1924-1932年)の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東京大學日本史學研究室紀要』 11, 2007 등 참조.

20 木村健二는 1920년대 齋藤實 총독 시기에는 일본 정당정치와 과별관계 등과 관련하여 잦은 政務總監의 교체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새로 내선한 ‘本國組’ 또는 ‘情實組’ 관료들의 주요 포스트 장악에 의한 인사이동이 심하였고 이에 따라 1910년대에 내선한 ‘生拔組’ 또는 ‘殘留組’ 관료들이 주변화되어 있었지만, 1920년대 말부터 ‘本國組’·‘情實組’가 감소하고 ‘生拔組’·‘殘留組’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木村健二, 위의 글, 296 쪽). 그런데 ‘本國組’를 포함하여 1920년대 내선한 후 조선에 계속 잔류한 관료들 역시 ‘신체제’ 수립기의 시점에서 보면 결국 2세대의 ‘生拔組’, ‘殘留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 阿部薫, 앞의 책, 164 쪽. ‘天降’은 일본은 물론 조선, 대만 등 식민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阿部薫은 대만과 조선을 비교하여 대만의 ‘天降’은 민간의 불만이나 관료의 不適應으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조선에서는 ‘天降’ 인물들이 일을 잘하고 민간에서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라고 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1930년대 중반 당시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阿部薫, 같은 책, 64-66 쪽, 141 쪽).

‘天降’ 인사가 ‘天降組’의 의미를 지니면서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일환으로 본격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宇垣一成의 농공병진정책 추진과 함께 그것이 조선 산업개발의 정책논리와 결합되면서였다. 이 시기 ‘天降’은 신설된 조선신탁, 금융조합 연합회 등 특수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전기·철도·제련·화학공업 계통의 회사로 확대되었다. ‘天降’ 대상자는 통감부 시기에 來鮮한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1910년대 내선하여 조선에 뿌리를 내린 ‘生拔’ 관료들이었다. 총독부는 이들을 매개로 공업화를 위한 자금통제와 전력통제, 그리고 자원개발과 독점 보호를 위한 각종 식민지 개발통제를 추진하였다.

‘天降組’ 규모는 南次郎 총독기에 접어들어 ‘자치통제’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더욱 확대되었다. 南次郎 부임 초기인 1936년과 37년에는 총독의 교체에 따른 대규모 인사 이동과 함께 6명의 국장을 비롯한 12명의 관료가 퇴관하여 ‘天降’ 함으로써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었다²². 나아가 1938년 이후 1940년에 걸쳐서는 전시경제통제가 강화되고 병참기지정책의 생산력확충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연이어 광공업 계통을 비롯한 여러 기간산업 분야의 國策會社 설립이 증대하고 기업합동이 추진됨으로써 ‘天降組’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²³. 요컨대 ‘신체제’ 수립기 ‘天降組’는 재계에 구축된 총독부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의 핵심 주체로서 총독부 관권과 독점자본의 유착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독점 본위의 병참기지정책과 ‘자치통제’가 지속될 수 있는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구조적 특질이었다²⁴.

이와 같이 ‘신체제’ 수립기 조선총독부의 경제지배시스템과 병참기지정책은 官僚를 중심으로 재계의 ‘天降組’와 독점자본 및 관변 이론진을 연결하는 강고한 ‘官治主義’ 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추진되었다. 총독부 권력은 이러한 ‘관치주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병참기지정책이 주력하는 산업개발·생산력확충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朝鮮財界 내부에 발생하는 資本間·業種間 갈등관계를 조정·통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독부의 경제지배시스템은 ‘신체제’의 전제주의 체제혁신 논리가 타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現狀維持勢力’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었다. 총독부는 일본정부의 國家統制에 지속적으로 편입되는 가운데에서도 병참기지정책의 지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완강히 유지하며

22 그 상징적인 ‘天降’이 1919년 이래 18년간 총독부 산업개발자금을 요리하며 ‘재계의 제일인자’ 위치에 있었던 식산은행 頭取 有賀光豊이 1937년 8월 日本高周波重工業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재무국장 林繁藏이 頭取로 취임한 것이다.

23 이상 1941년까지의 재계 ‘天降組’ 인사에 대해서는 嶋元勸, 『朝鮮財界の人々』, 京城: 京城日報社, 1941 참조. 附言하면 穗積眞六郎과 萩原彦三은 일본의 ‘天降’이 조선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의 ‘天降’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회고를 하였는데 (宮田節子 監修, 앞의 책, 216 쪽), 이는 회고 자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일본과 경제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조선의 경우 ‘天降’이 지니는 의미는 일본의 경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4 재조일본인 언론인으로서 보기 드물게 총독부 ‘관치주의’ 경제지배구조와 ‘자치통제’ 정책을 비판한 大朝 京城支局長 鈴木正文은 독점 본위의 조선의 ‘관치주의’ ‘자치통제’ 정책은 이들 ‘天降組指導者’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鈴木正文, 앞의 책, 92-93 쪽).

표 2 ‘天降組’ 일람

姓名	來鮮年度	最終官職	‘天降’年度	‘天降’ 당시 社 社 및 職位 이후 주요 변동사항	備考 (委員會經歷)
有賀光豊	1906	理財課長	1918	1918. 朝鮮殖産銀行 首席理事 1919. 朝鮮殖産銀行 頭取 1937. 日本高周波重工業 社長	① ③ ⑤ 委員
人見次郎	1908	鐵道局長 臺灣總務長官	1919	1919. 東洋拓殖 理事 1938. 西鮮中央鐵道 社長 1940. 朝鮮無煙炭 會長	⑤ 委員
河內山樂三	1907	財務局長	1922	1922. 朝鮮火災海上保險 社長	
和田一郎	1910	財務局長	1924	1924. 朝鮮商業銀行 頭取	
矢鍋永三郎	1907	黃海道知事	1925	1925. 朝鮮殖産銀行 理事 1933. 金融組合聯合會 會長 1939. 中川鑛業 社長	① 委員
吉村謙一郎	1910	海事課長	1925	1925. 朝鮮郵船 專務	
新田留次郎	1906	鐵道局 技師	1927	1927. 朝鮮鐵道 專務 1937. 朝鮮鐵道協會 副會長	③ 委員
中野太三郎	1909	咸鏡南道知事	1929	1929. 東洋拓殖 理事 1932. 東洋拓殖 東京本社 理事	
谷多喜磨	1909	慶尙南道知事	1930	1930. 朝鮮火災海上保險 社長 1932. 朝鮮信託會社 社長 1939. 漢江水力電氣 社長	③ ⑤ 委員
三井榮長	1910	勸業模範場 1級技師	1930	1930. 不二興業 專務 1938. 不二興業 社長	① ③ ⑤ 委員
松井房治郎	1914	咸鏡南道知事	1930	1930. 朝鮮米穀倉庫 社長	
倉原新	1916	道 理事官	1931	1931. 朝鮮米穀倉庫 常務	
時實秋穗	1919	京畿道知事	1932	1932. 京城日報 社長	
三木清一	1910	專賣局 副事務官	1932	1932. 朝鮮信託 支配人	
石川登盛	1919	平安北道知事	1932	1932. 朝鮮火災海上保險 社長	
林茂樹	1912	學務局長	1933	1933. 殖産銀行 理事 1939. 漢江水力電氣 專務 1941. 京春鐵道 社長	
山本犀藏	1924	遞信局長	1934	1934. 西鮮合同電氣 社長	
渡邊忍	1919	農林局長	1935	1935. 東洋拓殖 理事 1943. 朝鮮農地開發營團 理事長	
松本誠	1909	京畿道知事	1935	1935. 朝鮮製鍊 社長 1939. 金融組合聯合會 會長	③ ⑤ 委員
藤原喜藏	1919	平安南道知事	1935	1935. 北鮮製紙化學工業 專務 1935. 朝鮮洋紙配給 社長	
牛島省三	1931	內務局長	1936	1936. 京春鐵道 社長 1940. 死亡	
竹內健郎	1921	咸鏡南道知事	1936	1936. 富寧水力 社長 1938. 朝鮮水産 社長	
大島良士	1916	官房審議室 事務官	1936	1936. 朝鮮濫油脂聯合會 會長 1944. 朝鮮農地開發營團 理事長	
井上清	1917	遞信局長	1936	1936. 朝鮮電力會社 專務 1943. 南朝鮮水力電氣 社長	
伊達四雄	1921	慶尙北道知事	1936	1936. 京城土建協會 會長	
渡邊豐日子	1919	學務局長	1936	1936. 鮮滿拓殖 專務	⑤ 委員

今井賴次郎	1919	逓信局 電氣課長	1937	1937. 西鮮合同電氣 社長	① 幹事 ③ ⑤ 委員
松本伊織	1923	全羅南道知事	1937	1937. 朝鮮油脂 社長 1943. 重要物資營團 副理事長	
矢島杉造	1915	農林局長	1937	1937. 朝鮮林業開發 社長 1939. 朝鮮米穀市場 社長	① ③ 委員
土師盛貞	1920	慶尙南道知事	1937	1937. 朝鮮放送協會 會長	③ 委員
林繁藏	1913	財務局長	1937	1937. 朝鮮殖産銀行 頭取	① ③ ⑤ 委員
富永文一	1916	學務局長	1937	1937. 朝鮮殖産銀行 理事 1941. 朝鮮開拓 社長	① 委員
石塚峻	1913	穀物檢查所長	1938	1938. 朝鮮米穀倉庫 社長 1943. 朝鮮開拓 取締役	
上内彦策	1920	平安南道知事	1938	1938. 東洋拓殖 取締役 1943. 西鮮合同電氣·朝鮮電力·朝鮮石油·朝鮮有煙炭 取締役	
阿部千一	1920	慶尙南道知事	1938	1938. 日本産金振興 理事 (朝鮮支社長)	
草間秀雄	1924	財務局長 長崎市長	1938	1938. 日本産金振興 副社長	⑤ 委員
古庄逸夫	1919	稅務監督局長	1939	1939. 中央無盡 社長	
美座流石	1917	平安北道知事	1939	1939. 朝鮮마그네사이트開發 社長	
荻原三郎	1925	鐵道局 庶務課長	1939	1939. 朝鮮運送 專務 1943. 朝鮮運送 社長	
岡崎哲郎	1919	慶尙南道知事	1939	1939. 朝鮮畜産 社長	
佐藤作郎	1925	鐵道局 營業課長	1939	1939. 北鮮拓殖鐵道 專務	① ② 幹事
萩原彦三	1916	咸鏡南道知事 拓務省 拓務次官	1940	1940. 朝鮮鑛業振興 社長	① ③ ⑤ 委員
西本計三	1921	平安北道知事	1940	1940. 朝鮮鑛業振興 理事	① ② ③ 幹事
西崎鶴司	1920	財務局 理財課長	1940	1940. 朝鮮紡績工業組合 常務理事 1940. 朝鮮工業組合中央會 專務理事	① ② 幹事
大竹十郎	1933	內務局長	1941	1941. 朝鮮獎學會 理事長	① ② ③ ④ ⑤ 委員
藤本修三	1916	稅務監督局長	1941	1941. 朝鮮殖産銀行 理事	① ③ 幹事
佐藤德重	1910	平壤府尹	1941	1941. 朝鮮有煙炭 重役 1942. 朝鮮無煙炭 常務	
穗積眞六郎	1914	殖産局長	1941	1941. 京城商工會議所 會頭 1942. 京城電氣 社長 1944. 朝鮮興業 社長	① ② ③ ④ ⑤ 委員
湯村辰二郎	1918	農林局長	1942	1942. 朝鮮蠶絲統制 社長	② ③ ④ ⑤ 委員
山澤和三郎	1919	農林局長	1942	1942. 東洋拓殖 理事 1942. 朝鮮鑛業振興 理事	① ② ③ 委員

- 參考文獻 安龍植編, 『朝鮮總督府下 日本人官僚 研究』 I·II·III,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朝鮮新聞社編,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新聞社, 1922.
貴田忠衛,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阿部薫, 『朝鮮人物選集』, 京城: 民衆時論社, 1936 第3版.
嶋元勸, 『朝鮮財界の人々』, 京城: 京城日報社, 1941.
東洋經濟新報社, 『朝鮮産業年報 昭和十八年度版 朝鮮産業の決戦再編成』, 1943, 제 2 부.
谷サカヨ, 『第十四版 大衆人事錄』, 東京: 帝國秘密探偵社, 1943.
- 備考 ① 朝鮮産業經濟調査會 (1936. 10) ② 朝鮮總督府時局對策準備委員會 (1938. 2)
③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 (1938. 9) ④ 朝鮮總督府企劃委員會 (1940. 10. 7)
⑤ 朝鮮總督府國土計劃委員會 (1940. 10. 30)

이를 바탕으로 국가통제와 円블록 건설에 대처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그 지배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기본 軸을 흔드는 체제혁신적 경제재편성론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부가 ‘신체제’ 수립에 대면하여 특이한 방식으로 표출하였던 위기의식의 기본 소재와 내면은 이러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거부감과 위기의식은 円블록에서의 조선의 위치 설정 문제와 결부된 누적된 불만과 증착됨으로써 병참기지정책의 발전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연결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병참기지정책은 日滿支 생산력확충계획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통제 대상으로만 파악되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고, 이에 따라 円블록에서의 조선의 위치 설정 문제와 조선산업개발에 대한 통제 문제를 둘러싼 총독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구조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갈등구조에는 여러 배경이 작용하였지만 그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 군부나 민간여론 일반이 円블록 건설에서 조선의 자원개발·산업개발이 갖는 국책적 역할과 의의를 극히 경시하였다는 데 있었다. 이는 결국 일제 円블록 건설정책이 일본자본주의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식민지 개발문제를 円블록 건설에 적절하게 연관시켜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였다.²⁵

병참기지정책의 추진은 중일전쟁과 함께 円블록이 日滿支 규모로 확대되자 이러한 종속관계를 재조정하고 조선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을 타개하려는 南次郎과 총독부의 의욕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본정부 역시 여러 이유에서 병참기지정책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병참기지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냉소적 분위기가 지속되었다²⁶. 병참기지정책은 총독부의 의욕과 관계없이 여전히 日滿支 생산력확충계획의 종속적 위치에 있는 개별적 ‘식민지 생산력확충계획’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병참기지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총독부는 병참기지정책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를 타개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조선홍보캠페인’, ‘朝鮮周知運動’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⁷. 이와 같이 그 연원이 복잡한 조선경시 풍조, 냉소적 분위기는 조선개발의 담당 주체인 총독부 관료들의 자의식을 크게 자극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총독부 관료의 불만과 관변 지식인의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南方 자원 확보에 주목적을 둔 大東亞共榮圈 건설과 일원적 통제 강화를 표방한 ‘신체제’의 새로운 円블록 건설방침은 일면에서 병참기지정책의 발전 전망에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25 이 갈등구조의 추이와 성격에 대해서는 방기중, 앞의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참조.

26 鈴木正文, 「朝鮮經濟の全體性と特殊性」, 『金融組合』 136, 1940. 1; 堂本敏雄, 「大陸兵站基地小論」, 『朝鮮』 296, 1940. 1; 本田秀夫, 「工業朝鮮の周知策小見」, 『朝鮮』 299, 1940. 4.

27 주 26의 인용자료와 같음.

3. 朝鮮總督府의 ‘新體制’ 對應論理와 兵站基地強化政策

1) 南次郎의 復古主義的 ‘新體制’ 立場과 ‘朝鮮新體制運動’

제 2차 近衛內閣의 ‘신체제’ 정책을 받아들이는 총독부의 입장과 정서는 기본적으로 이상과 같았다. 따라서 ‘內鮮一體’의 ‘皇民化政策’을 공고히 하고 병참기지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정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만 ‘신체제’ 정책은 일본정부의 國策으로 제시된 것인 만큼 이 國策 기초에 적극 부응하면서 체제혁신 논리와 대동아공영권 건설 방침에 대응하는 총독부 입장의 ‘신체제’ 논리와 방침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복잡한 정치적·사상적 갈등을 노정하면서도 ‘정치신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大政翼贊會 결성 원칙이 정해지는 등 「基本國策要綱」의 후속 방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또 일부 조선인들의 체제혁신 여론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신체제’에 대한 총독부의 입장 정리가 시급히 요구되었다.

총독부의 본격적인 ‘신체제’ 대응은 1940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물론 ‘황민화정책’과 병참기지정책의 기초, 그리고 그 권력기반으로서의 총독부 지배질서와 ‘관치주의’ 통제시스템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단히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곧 ‘혁신세력’의 체제혁신 이념을 강하게 견제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朝鮮新體制’의 이념과 논리를 구축하고 그 정책 방침을 신속히 구체화함으로써 ‘신체제’ 수립을 오히려 ‘내선일체’ 통치이념과 병참기지정책의 확대·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 작업은 ‘신체제’에 대한 南次郎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朝鮮新體制運動’의 추진 및 병참기지강화정책 등 크게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1940년 9월 5일 南次郎은 「基本國策要綱」이 발표된 지 한달 이상의 침묵을 깨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주최한 「戰時國民生活強調祈誓式」 강연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新體制觀’을 공식 천명하였다. 그는 ‘신체제’의 의미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방법은 극히 간단명료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신체제’의 근본정신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규정하였다²⁸.

新體制的 목표는 우리 國體에 기초한 바 萬民이 모두 皇謨를 翼贊하고 받드는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만민이 皇謨를 翼贊하고 받드는 길은 만민이 모두 반성 자숙하여 滅私奉公하는 이외에 길은 없습니다. 즉 新體制的 길은 확고부동하고 명료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도 극히 간단명료합니다.

곧 南次郎이 강조한 ‘신체제’의 근본정신은 ‘國體本義’에 기초하여 ‘皇謨翼贊’과 ‘멸사봉공’하는 ‘皇道精神’이었다. 이에 그는 ‘신체제’의 의미를 “일본의 옛 모습으로 復古하는 것”, “八紘一字의 大理想에 기초한 天皇親政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28 南次郎 講演錄, 「南總督 新體制を説く」, 『總動員』1940. 10, 19 쪽.

규정하고, 이것이 ‘皇國의 國是’인 ‘肇國大精神’의 본의임을 천명하였다²⁹.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현재 각종 ‘신체제’의 후속 방침이 심의 중이지만 “그것이 여하한 것이라도 결국 목표는 皇謨翼贊 이외의 어떠한 것도 아니”며 그것은 “時日이 증명”할 것이라고 斷言하고, 나아가 “강력한 新體制”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一億一心을 一丸으로 하는 舉國一致體制”를 구축하고 ‘減私奉公’의 ‘國家至上主義’로 그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였다³⁰.

南次郎의 복고주의적 ‘신체제관’은 체제혁신의 전체주의 ‘신체제관’과 입장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신체제’가 과격한 체제혁신 논리가 아니라 ‘國體本義’의 ‘황도정신’과 ‘멸사봉공’의 국가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식민지를 포함하는 기존 지배질서를 바탕으로 온건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가 ‘신체제’ 구축의 유일한 길로 제시한 ‘舉國一致體制’에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그것은 기존 통치질서·지배체제를 혁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제’ 확립의 주체이자 기반으로 파악하는 체제유지의 ‘신체제관’이었다. 말하자면 南次郎의 강연은 ‘신체제’를 주도하는 ‘혁신세력’에 대한 조선총독의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신체제관’을 바탕으로 南次郎은 자신의 통치 슬로건인 ‘內鮮一體’가 바로 ‘신체제’ 정신의 구현이자 국방국가·대동아공영권 건설의 基礎觀念임을 공식 표방하였다³¹. 그것은 조선의 경우 ‘신체제’ 확립의 요체가 ‘皇謨翼贊’ ‘減私奉公’의 정신무장을 기반으로 ‘내선일체’와 병참기지정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있다는 ‘朝鮮新體制’의 이념과 운동지침을 천명한 것이었다. ‘혁신세력’의 ‘신체제’ 논리와 정치적·사상적 입장을 크게 달리하는 南次郎의 이러한 복고주의적 ‘신체제관’은 총독부 관변 지식인은 물론 조선인 지식인의 ‘신체제’ 인식이나 전체주의 인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신체제’ 수립기 조선의 사상 동향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이 강연을 계기로 ‘신체제’는 ‘八紘一宇’의 사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복고주의 입장이 보편화되었고, ‘신체제’ 이념으로 표상된 전체주의도 ‘황도정신’과 동일시하거나 그 일부로 간주하는 복고주의적 전체주의관이 크게 확산되었다³². 특히 일부 관변 일본인들은 체제혁신을 도모하는 ‘혁신세력’의 ‘신체제운동’을 “暴力團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新體制主義者의 橫行”으로 간주하면서 그 과격성을 비판하고 그것이 조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

29 南次郎 講演錄, 21 쪽. 이러한 복고주의 입장에서 南次郎은 ‘新體制’라는 용어도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일면 ‘觀念右翼’의 ‘日本主義’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지만, 南次郎의 복고주의는 ‘일본제국’이 성취한 資本主義 近代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관념우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國家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중요한 차이가 있다.

30 南次郎 講演錄, 19-20 쪽.

31 南次郎 講演錄, 21 쪽; 南次郎, 「施政三十年を迎ふ」, 『總動員』 2-10, 1940. 10, 4 쪽.

32 社説, 「日獨伊三國同盟」, 『朝光』 6-11, 1940. 11; 黃舜鳳, 「日獨伊三國政治體制」, 『朝光』 6-12, 1940. 12; 南曾石, 「新體制에 適應한 朝鮮의 理念」, 『新人間』 151, 1940. 12.

도록 경계하기도 하였다³³.

이와 같이 총독에 의해 ‘신체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정리되고 ‘조선신체제’의 운동방향이 정해지면서 총독부의 ‘朝鮮新體制運動’은 「基本國策要綱」발표 당시의 관망적 자세와는 달리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총독부의 ‘조선신체제운동’은 일본 大政翼贊會 조직에 발맞추어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농촌진흥회 등 각종 사상조직·산업조직을 통합한 國民總力朝鮮聯盟의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화하였다³⁴. 국민총력조선연맹은 南次郎 스스로 결성 ‘訓示’에서 밝히고 있듯이 앞서 제시한 ‘舉國一致體制’의 구현인 바, 총독이 ‘首班’을 겸하는 “총독정치와 표리일체”의 관계에서 행정조직과 국민운동조직을 통합한 ‘官民一體’의 운동조직이었다³⁵. 곧 ‘조선신체제운동’은 체제혁신의 논리를 배제하는 가운데 ‘내선일체’와 기존 지배질서의 강화를 통해 조선과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주 목적을 둔 ‘戰時植民地總動員強化運動’이자 ‘皇民強化政策’으로서, 여기에 총독정치의 무소불위한 집권력을 기반으로 한 총독부 ‘관치주의’ 식민지배의 특성이 집중 반영되고 있었다.

2) 兵站基地強化政策과 ‘官治主義’ 統制시스템의 擴大

총독부는 이와 같은 정치·사상면에서의 ‘조선신체제운동’의 추진과 함께 병참기지정책 강화에 목표를 둔 ‘經濟新體制’의 대응논리와 정책방침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상호 표리관계에 있는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하나는 대동아공영권 건설과 체제혁신적 경제재편성론에 대응하면서 병참기지정책의 국제적 의의와 당위성을 재천명할 수 있는 새로운 朝鮮開發論理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에 입각하여 병참기지정책을 강화하고 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었다. 日滿支블록 단계에 조응했던 병참기지정책의 개발논리를 대동아공영권 단계의 개발논리로 확대시킨 國土開發計劃論의 제창과 國土計劃委員會의 설치가 각기 그것이었다.

총독부가 병참기지정책을 추진할 당시 日滿支블록 건설에 조응하여 조선개발의 국제적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 동원한 블록개발 논리는 주지하듯이 대륙진진병참기지로써 조선의 지역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內鮮블록’론과 ‘北鮮·大陸루트’론이었다. 곧 ‘내선일체’이데올로기를 경제영역에 확장하여 日滿支블록 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내선블록’의 존재를 강조하는 가운데 조선의 위치를 일본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內地經濟의 大陸前衛’, ‘대륙의 일각에 위치하는 제 2의 內地’로 규정함으로써 日滿支 생산력확충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병참기지정책의 국제·국방적 의의를 확보하고 만주산업개발계획에

33 「編輯後記」, 『朝鮮行政』1940. 11, 149 쪽.

34 ‘朝鮮新體制運動’에 대해서는 전상숙,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방기중 편, 앞의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44-51 쪽; 金雲泰, 앞의 책, 2002, 453-461 쪽 등 참조.

35 「臨時道知事會議に於ける總督訓示要旨」, 『朝鮮』1940. 11, 63 쪽.

대한 종속적 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³⁶.

그러나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병참기지정책의 이러한 논리는 대외적으로는 별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日滿支 생산력확충계획에 대한 병참기지정책의 종속적 위치 역시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현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병참기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 논거가 요구되었고, 총독부는 그것을 「基本國策要綱」을 통해 ‘경제신체제’ 확립의 한 要目으로 표방된 國土開發計劃의 논리에서 찾았다. 국토개발계획은 日滿支블록과 남방을 포괄하는 대동아공영권 확립과 國防國家 태세의 완비를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교통·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인구의 통제적 배분계획에 중점을 두고 국토의 총력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국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데 목표를 둔 대동아공영권 건설 방안으로 구상된 것이지만³⁷, 총독부가 이러한 국토개발계획으로부터 병참기지정책의 강화논리를 찾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도에서였다.

하나는 조선은 일본 국토의 한 부분이라는 國土觀念을 강조함으로써 병참기지정책이 日滿支 종합개발계획의 중요한 일환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러한 전제 아래 “조선 독자의 國土計劃 즉 부분적 계획”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³⁸. 이는 곧 조선의 종속적 위치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종합국력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 일본국가의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병참기지정책이 지니는 의의와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연장에서 ‘경제신체제’가 요구하는 經濟再編成의 要諦가 조선의 경우에는 경제체제의 혁신 문제가 아니라 종합국토계획에 기여하는 국토개발·자원개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조선과 병참기지정책의 지역적 의의를 재삼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³⁹.

이와 같이 國土開發計劃論은 세계대전기 전쟁 수행과 남방 진출을 위한 전시 국가통제가 연이어 확대되고 있는 불가피한 추세 속에서도 ‘조선특수사정론’과 ‘자치통제’ 방침에 입각한 병참기지정책의 산업개발 논리,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경제통제·경제블록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총독부의 정책적 입장과 그 내면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의미에서 국토개발계획 논리에 입각한 병참기지강화론은 체제혁신의 ‘경제신체제론’에 대응한 체제유지의 ‘朝鮮經濟新體制論’이자 대동아공영권 단계의 ‘조선블록개발론’이라 할 수 있었다⁴⁰.

36 鈴木武雄, 『大陸兵站基地論解』, 京城: 綠旗聯盟, 1939;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編, 『朝鮮經濟年譜』, 東京: 改造社, 1939, 제 1 부 제 3 장, 제 3 부 제 2 장; 鈴木武雄, 「北鮮ルート論」, 『朝鮮經濟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論集 3)』, 東京: 岩波書店, 1938; 鈴木武雄, 「大陸ルート論」, 『アジア問題講座 3(政治·軍事篇 3)』, 東京: 創元社, 1939.

37 企劃院研究會, 앞의 책, 165-171 쪽.

38 矢倉一郎, 「朝鮮國土計劃論(一)」, 『朝鮮行政』 1940. 9, 50-53 쪽.

39 이러한 국토개발계획 논리의 요점과 의도는 京城帝大 교수 鈴木武雄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鈴木武雄, 「半島産業發達の現段階とその發展への展望」, 『朝鮮』 305, 1940. 10).

40 상론할 여유는 없지만 1941년에 접어들어 그간 유명무실했던 ‘鮮滿一加’ 슬로건이 다시 강조되고 鮮滿間의 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국토개발계획론의 연장에서였다.

이러한 국토개발계획의 논리 아래 총독부는 1940년 10월 30일 朝鮮總督府國土計劃委員會를 설치하고 병참기지강화정책의 추진을 공식화하였다⁴¹. 사실 총독부는 이미 제2차 近衛內閣 성립 당시인 7월 중순 '신체제' 정책에 조응한 병참기지강화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國土計劃委員會를 중심으로 物動計劃委員會, 生産擴充委員會 등 3개의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준비하고 8월 상순 그것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基本國策要綱」발표 이후의 정세 추이와 관련하여 그 공식 출범을 유보하고 있었다⁴². 그러나 9월 24일 「基本國策要綱」후속 조치의 하나로 일본 閣議에서 결정된 「國土計劃設定要綱」에는 '대동아' 건설과 관련한 조선의 위치 설정은 물론 조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그러한 입장에서 內閣 國土計劃委員會가 설치되었다⁴³. 상술한 바와 같이 이는 총독부 입장에서도 예상한 것이었고, 이에 日滿支블록의 국토개발계획에 순응하는 가운데 병참기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총독부 독자의 국토개발계획 차원에서 國土計劃委員會 설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토계획위원회 설치 배경과 의도는 정무총감 大野綠一郎이 “국책 大綱에 卽應하여 내지 및 만주국과 서로 호응해서 반도의 특수성을 기조로 하는 國土計劃을 준비하여 조선통치의 최고 목표인 內鮮一體 실현과 帝國의 대륙진진기로서의 사명 완수에 매진”함에 있어 “새로운 진용과 새로운 구상으로서 半島가 大東亞新秩序 건설 도상에서 점해야 하는 역할을 검토하고 曠古의 大業을 翼贊하여 받드는 때에 반도의 실력에 상응하는 地位를 확보하는 것은 진실로 의의있는 것으로 국토계획에 負荷된 사명은 큰 것”이라고 그 설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데에 선명히 드러나 있었다⁴⁴.

이와 같이 國土計劃委員會는 그 명칭이 함의하는 것보다 격이 높은 병참기지강화정책의 지도기구의 성격이 부여된 조직으로서, 과거 산업개발정책·병참기지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朝鮮産業經濟調查會나 時局對策調查會 등과 여러 면에서 그 기구의 성격을 달리하였다. 과거 두 기구는 총독부 정책논의와 위상을 둘러싼 일본정부·만주와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주안점을 둔 日鮮滿 합동회의 형식의 임시 특별자문기구였다. 따라서 두 기구를 통해서 총독부 정책의 향방이 최종 결정되기는 하였지만, 두 기구 자체가 정책 기획과 운영을 직접 관장한 지배시스템은 아니었다. 이에 반해 국

4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4132, 1940. 10. 30, 194 쪽, 朝鮮總督府訓令第六十號.

42 총독부는 近衛內閣 성립과 함께 “全體主義 세계현실에 따라 高度國防國家를 건설하고자 추진 중인 新政治體制에 맞추어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실력을 최고도로 발휘” 한다는 취지에서 8월 상순 國土計劃委員會를 중심으로 物動計劃委員會·生産擴充委員會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朝鮮日報』는 이들 특별위원회의 중심기구로서,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독부 관련 국·과장과 군부, 학자, 민간층을 망라하여 구성한다는 國土計劃委員會에 대해 병참기지정책의 ‘브레인 트러스트’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朝鮮日報』 1940년 7월 17일, 「朝鮮統治에 새로운 推進力」).

43 「國土計劃設定要綱」 원문은 企劃院研究會, 앞의 책, 148-151 쪽 참조. 일본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특히 陸軍省의 「國土計劃設定要綱」 취지 설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陸軍省內閣情報部, 「國土計劃에 對하여」, 『朝光』 1940. 11, 80-82 쪽), 이는 1940년 11월 2일 결정한 「日滿支經濟建設要綱」(企劃院研究會, 같은 책, 127-132 쪽)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日滿支블록 건설과 관련한 조선에 대한 위치 설정은 완전 배제되어 있었다.

44 (彙報) 「朝鮮總督府國土計劃委員會 設置」, 『朝鮮』 306, 1940. 11, 72 쪽.

토계획위원회는 두 기구의 정책적 위상을 계승하면서도 임시 자문기구가 아니라 총독부 常設機構로 설치되었고, 또 그 기구의 일차적인 설치 목적도 日鮮滿의 이해 조정과 상호 협조보다는 조선 국토계획의 독자적 기획과 운영에 두고 있었다⁴⁵. 이러한 의미에서 국토계획위원회는 총독부 최초의 관민합동의 상설 경제기획기구로서, 병참기지강화정책의 ‘參謀本部’ 이자 지도부의 위상을 갖는 특별기구였다.

동시에 국토계획위원회 설치는 그간 임의적·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총독부의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의 체계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朝鮮産業經濟調查會와 時局對策調查會 준비 과정을 통해 잘 나타나듯이 과거 분기를 이룬 총독부 경제정책의 기획과 운영방식은 총독부 관료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형식의 임시기구를 통해 마련되었고, 이와 결부된 경제지배시스템의 작동도 관료와 ‘天降組指導者’ 및 재계 유력자들의 임의적이고 비체계적 협력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비체계성이 ‘관치주의’ 행정의 폐단인 ‘관료독선주의’나 ‘割據主義’를 낳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총독부가 국토계획위원회 설치에 앞서 1940년 10월 7일 “병참기지정책의 생산력확충계획과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企劃委員會를 설치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기획과 통제운영의 종합적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⁴⁶. 그러나 병참기지정책 강화의 논거를 國土開發計劃에서 찾은 총독부는 기획위원회를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은 관료조직으로 운영하는 대신 국토계획위원회를 官民合同으로 구성하여 병참기지정책의 지도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였다⁴⁷.

요컨대 국토계획위원회는 병참기지강화정책을 지도하는 企劃機構인 동시에, 군부를 포함하여 ‘天降組’와 독점자본 및 관변 이론진을 연결하는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이 처음으로 공식 총독부 기구로 체계화된 統制機構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제’에 대응한 병참기지강화정책은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체계화를 수반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 체계화의 본질은 기존 경제지배시스템의 ‘관치주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국토계획위원회가 기존 ‘官治主義’ 경제지배시스템과 그 주역을 기구적으로 재편성한 데 불과한 위원회 구성 실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표 3〉은 國土計劃委員會 위원·간사의 구성과 개인별 관련 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국토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인 정무총감 大野綠一郎 아래 고급 고등관 관료와 재계 인사를 골간으로 하면서 군 장교와 지식층을 포함한 총 42명의 官民合同의 委員陣과,

45 국토계획위원회와 과거 두 기구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大野綠一郎이 함축적인 방식으로 지적한 바와 같다 (주 44의 인용자료와 같음).

4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4114, 1940. 10. 7, 29 쪽, 朝鮮總督府訓令第五十三號. 기획위원회의 설치 목적으로 보아 이 기구는 전술한바 총독부가 당초 국토계획위원회 설치와 함께 구상한 물동계획위원회와 생산확충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47 주 44의 인용자료 참조.

표 3 朝鮮總督府國土計劃委員會 구성 일람

(1940. 10. 30)

職位	姓名	來鮮 年度	現職	以後 主要經歷 (官僚에 限)	備考 (委員會 經歷)	
委員長	大野綠一郎	1936	政務總監	42. 5 貴族院 議員	① ② ③ ④ 委員長	
委員 官僚	大竹十郎	1933	內務局長	41. 1 免本官 41. 1 朝鮮獎學會 理事長	① ② ③ ④ 委員	
	水田直昌	1924	財務局長	45. 8 免本官	② ③ ④ 委員	
	穗積眞六郎	1914	殖産局長	41. 11 免本官 41. 11 京城商工會議所 會頭 42. 12 京城電氣 社長	① ② ③ ④ 委員	
	湯村辰二郎	1918	農林局長	41. 11 免本官 42. 5 朝鮮蠶絲統制 社長	② ③ ④ 委員	
	宮本元	1920	法務局長	43. 2 總督府 判事	② ③ ④ 委員	
	塩原時三郎	1936	學務局長	41. 3 厚生省 職業局長	② ③ ④ 委員	
	三橋孝一郎	1929 1936	警務局長	42. 6 免本官	① ② ③ ④ 委員	
	諏訪務	1936	外事部長	41. 11 專賣局長 42. 10 免本官	④ 委員	
	西岡芳次郎	1921	企劃部長	41. 11 慶尙南道知事 43. 3 免本官	② 幹事 ③ 幹事 ④ 委員	
	山田忠次	1920 1936	遞信局長	41. 5 免本官 44. 6 朝鮮住宅營團理事長	① ③ ④ 委員	
	山田新十郎	1939	鐵道局長	43. 12 免本官	④ 委員	
	松澤龍雄	1936	專賣局長	41. 11 京畿道知事 42. 4 免本官	② ③ ④ 委員	
	鈴川壽男	1932	京畿道知事	41. 11 司政局長 42. 10 免本官	① 幹事 ② ③ ④ 委員	
	篠田治策	1904	京城帝國大學 總長	37. 李王職 長官		
	碓井忠平	1923	官房 審議室 事務官	42. 10 黃海道知事	① 幹事 ② 委員 ③ 幹事 ④ 委員	
	丹下郁太郎	1922	官房 會計課長 企劃部 兼務	42. 6 警務局長	② 委員 ③ 幹事 ④ 委員	
	伊藤泰吉	1925	官房 人事課長	42. 10 專賣局長 44. 8 遞信局長	② 幹事 ③ 幹事 ④ 委員	
	信原聖	1924	官房 文書課長	43. 7 平安北道知事	④ 委員	
	財界 天降組	有賀光豊	1906	日本高周波重工業 社長	兼 貴族院 議員 18. 殖産銀行 天降	① ③ 委員
		新田留次郎	1906	朝鮮鐵道協會 副會長	27. 朝鮮鐵道 天降	③ 委員
人見次郎		1908	西鮮中央鐵道 社長 朝鮮無煙炭 社長	19. 東洋拓殖 天降		
谷多喜磨		1909	漢江水電 社長	30. 朝鮮火災海上保險 天降	③ 委員	
松本誠		1909	金融組合聯合會 會長	35. 朝鮮製鍊 天降	③ 委員	
三井榮長		1910	不二興業 社長	30. 不二興業 天降	① ③ 委員	
林繁藏		1913	朝鮮殖産銀行 頭取	37. 同職 天降	① ③ 委員	
萩原彦三		1916	朝鮮鑛業振興 社長	40. 同職 天降	① ③ 委員	
渡邊豐日子		1919	朝鮮林業開發 社長	36. 鮮滿拓殖 天降		
今井賴次郎		1919	西鮮合同電氣 社長	37. 同職 天降	① 幹事 ③ 委員	
草間秀雄		1924	日本産金 副社長	38. 同職 天降		

財界 企業人	松原純一		朝鮮銀行 總裁	35. 朝鮮銀行 副總裁 41.12. 朝鮮商工會議所 會頭	③ 委員
	野口遵		日本窒素肥料 社長 朝鮮水力電氣 社長	兼 朝鮮送電 社長	① ③ 委員
	阿部梧一		朝鮮重工業 社長 朝鮮電氣製鋼 社長		③ 委員
	津田信吾		鐘淵紡績 社長		① ③ 委員
	小林采男		小林鑛業 社長		③ 委員
	池邊龍一		東洋拓殖 副總裁		
	村上義一		朝鮮運送 社長		
	樺木幹雄		朝鮮郵船會社 社長		
學界	大河內正敏		理化學研究所 所長	兼 貴族院 議員 兼 內閣 顧問	① ③ 委員
言論	御手洗辰雄		京城日報 社長	37. 京城日報 副社長	
軍部	加藤輪平		陸軍 小將		
	高間完		海軍 大佐		
	幹事	山地靖之	1926 財務局 理財課長	42. 殖產局 商工課長 45. 3 平安北道知事	② 幹事 ④ 幹事
	奧村重正	1927 財務局 司計課長	45. 8 同職	② 幹事 ③ 幹事 ④ 幹事	
	山名酒喜男	1929 財務局 關稅課長	41. 企劃部 計劃課長	② 幹事	
	塩田正洪	1924 殖產局 鑛山課長	41. 11 企劃部長 42. 10 農林局長 43. 12 農商局長	① 幹事 ④ 幹事	
	井坂圭一郎	1924 殖產局 商工課長 兼 企劃部 第3課長	44. 9 平安南道知事	② 委員 ③ 幹事 ④ 幹事	
	木野藤雄	1930 殖產局 產金課長	42. 殖產局 燃料課長	④ 幹事	
	岡信依助	1932 殖產局 水產課長	43. 農商局 商務課長	④ 幹事	
	油井堊治	1914 農林局 畜產課長	43. 免本官	④ 幹事	
	山下眞一	1914 農林局 林政課長	41. 釜山府尹 42. 稅務監督局長	② 幹事 ④ 幹事	
	井芹正	1920 農林局 林業課長	42. 免本官	② 幹事 ④ 幹事	
	下飯坂元	1922 農林局 糧政課長	42. 6 平安南道知事	② 幹事 ④ 幹事	
	岸勇一	1926 農林局 農業振興課長	45. 2 咸鏡南道知事	② 幹事 ④ 幹事	
	厚地法人	1927 農林局 農務課長	45. 農商局 鑛山課長	④ 幹事	
	乾明	1932 農林局 土地改良課長	43. 死亡	④ 幹事	
	美根五郎	1925 企劃部 第1課長	44. 8 黃海道知事	② 幹事 ③ 幹事 ④ 幹事	
	渡部肆郎	1925 企劃部 第2課長	42. 司政局 地方課長	④ 幹事	
	安田宗次	1927 企劃部 第4課長	42. 農林局 林政課長	④ 幹事	
	辻桂五	1926 外事部 拓務課長	41. 財務局 理財課長 45. 京城府尹		
	黑田吉夫	1924 遞信局 海事課長	42. 免本官	④ 幹事	
	下城義三郎	1927 遞信局 航空課長	43. 交通局 航空課長		
	西田豊彦	1930 遞信局 電氣 第1課長	43. 交通局 海事課長	④ 幹事	
	吉田日出男	1931 遞信局 庶務課長	43. 遞信局 總務課長	④ 幹事	
	田邊多聞	1925 鐵道局 調查課長	43. 交通局 理事	④ 幹事	
	木下麟太郎	1928 專賣局 庶務課長	42. 殖產局 鑛山課長	④ 幹事	

森長文	1924	專賣局 事業課長	41. 外事部 拓務課長 44. 免本官	② 幹事
横井増治	1913	内務局 土木課長	42. 京城帝大教授 兼	④ 幹事
林勝壽	1929	内務局 社會課長	41. 内務局 勞務課長	④ 幹事
古川兼秀	1925	警務局 保安課長	45. 平安南道知事	② 幹事
八木信雄	1926	警務局 警務課長	44. 黃海道知事	④ 幹事
筒井竹雄	1927	警務局 地方課長	45. 黃海道知事	④ 幹事
北村輝雄	1929	警務局 防護課長	44. 東京事務所長	④ 幹事
本多武夫	1929	警務局 島嶼課長	42. 學務局 學務課長 44. 司政局 地方課長	
森浦藤郎	1921	法務局 法務課長	41. 總督府 檢事	② 幹事
倉島至	1925	學務局 學務課長	42. 官房 文書課長	④ 幹事

- 參考文獻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3319, 1938. 2. 10, 敍任及辭令, 121~122 쪽.
安龍植編, 『朝鮮總督府下 日本人官僚 研究』 I·II·III,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朝鮮新聞社編,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新聞社, 1922.
貴田忠衛,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阿部薫, 『朝鮮人物選集』, 京城: 民衆時論社, 1936 第3版.
嶋元勸, 『朝鮮財界の人々』, 京城: 京城日報社, 1941.
東洋經濟新報社, 『朝鮮産業年報 昭和十八年度版 朝鮮産業の決戦再編成』, 1943, 제2부.
谷サカヨ, 『第十四版 大衆人事錄』, 東京: 帝國秘密探偵社, 1943.
- 備考 ① 朝鮮産業經濟調查會 (1936. 10) ② 朝鮮總督府時局對策準備委員會 (1938. 2)
③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查會 (1938. 9) ④ 朝鮮總督府企劃委員會 (1940. 10. 7)

중앙부서 소속의 중급 고등관 관료로 선임된 幹事陣으로 구성되었다⁴⁸. 이들 위원과 간사는 모두 일본인으로, 朝鮮人 관리나 재계인사는 국토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완전 배제되었다. 이는 다수 조선인을 참여시킨 朝鮮産業經濟調查會와 時局對策調查會의 경우나, 국토계획위원회와 같은 시기에 구성된 國民總力朝鮮聯盟 임원 인선과 비교할 때 크게 구별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는 총독부가 병참기지정책과 국토개발계획을 총괄 지도하는 상설적인 경제기획기구·경제지배시스템에는 조선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고급 관료진이 전체의 40% (17명) 를 차지하는데, 관례대로 局長會議 멤버인 중앙 각 부서의 국장·부장과, 관방 소속 고참 과장들이 선임되었다. 京城帝大 총장 篠田治策의 선임은 관변 이론진의 산실인 경성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전체의 47% (20명) 를 차지하는 재계 위원들은 조선은행·식산은행·금융조합연합회 등 관변 금융기관의 장을 비롯하여 전기·철도·운송 등 기간산업 분야와 농림업·광업·중공업·방직업 등 조선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중추적 국책기업·독점기업의 사장·중역들로 구성되었다. 貴族院 의원, 內閣 고문을 겸하고 있는 理化學研究所長 大河内正敏은 在朝 인사는 아니지만 1936년 朝鮮産業經濟調查會 위원을 역임한 이

48 <표 3>에서는 과장 이상의 간사전만 소개하고 일반 사무관은 생략하였다. 또한 이후 직급이나 소속부서의 변화에 따르는 간사의 보충이 계속되지만 이 역시 모두 생략하였다.

래 줄곧 총독부 정책에 적극 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외에 총독부 기관지인 京城日報社 사장으로서는 南次郎의 측근인 御手洗辰雄이 관변 언론을 대표하여 위원이 되었고⁴⁹, 군부와의 협조를 위해 2명의 군 장교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과장급 고등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사진은 국토계획위원회의 각 부문별 사업계획 마련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기획·실무진들이었다. 중앙 각 부서의 과장들이 망라되는 가운데, 특히 위원회 설치 취지와 관련하여 병참기지정책·국토개발계획과 직접 연관되는 企劃部の 4개과 과장 전원과 재무국·식산국·농림국·체신국의 각과 과장 대부분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또한 ‘관치주의’ 지배시스템 유지에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재무국의 주요 과장들 역시 다수 동원되었다.

이상과 같은 國土計劃委員會 구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주목하게 되는 첫째 사실은, 표의 ‘비고’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委員 대부분이 일본정부로부터 ‘자치통제’의 제도적 공인을 확보했던 朝鮮産業經濟調查會와 병참기지정책을 공식화했던 時局對策調查會의 위원이나 간사를 역임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곧 이들 위원진 가운데 대다수 고등관료와 상당수 재계인사들은 이미 宇垣一成 단계 이래 농공병진정책을 주도하고 병참기지정책을 기획·추진하면서 ‘조선특수사정’의 논리와 ‘자치통제’ 방침에 입각한 독점자본 본위의 조선 경제지배구조와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역을 담당한 당사자들이었다. 또한 간사진 가운데 다수의 고참 고등관 관료들 역시 전술한 時局對策準備委員會의 위원 내지 간사를 역임한 인물들로서, 병참기지정책을 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할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로 앞의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관료 위원과 고참 관료 간사진의 來鮮 시기이다. 총독부 권력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이들 고등관 관료들은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에 걸쳐 내선하여 조선에 뿌리를 내린 식민지 ‘生拔’ 관료들이었다⁵⁰. 위원의 경우 병참기지정책의 주무자 위치에 있는 경제관계 국·부장 — 식산국장 穗積眞六郎, 농림국장 湯村辰二郎, 재무국장 水田直昌, 기획부장 西岡芳次郎 등 — 과 관방 소속 고등관 전원이 1910년대에서 20년대 전반에 내선하였고, 간사진의 경우에는 1930년대 초반에 내선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1920년대에 내선하였으며, 1910년대에 내선한 고참 고등관 간사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일제 관료체계에서 본다면 주변화된 閑職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관료로서 관료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른 한편 이와 같이 조선에 관료로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조선사정과 조선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노련한 ‘朝

49 御手洗辰雄은 南次郎이 부임하면서 京城日報社 사장으로 영입한 高田知一郎의 간청으로 1937년 부사장에 취임하였고 1939년 사장이 되었다. 南次郎 정책을 적극 후원한 측근으로서, 이후 南次郎傳記의 편찬 대표가 되었다 (御手洗辰雄, 『南總督の朝鮮統治』, 京城: 京城日報社, 1942; 御手洗辰雄 編, 『南次郎』, 東京: 南次郎傳記刊行會, 1957).

50 이에 해당되지 않는 1930년대에 내선한 국장급 관료 위원은 宇垣一成과 南次郎이 부임하면서 대동한 측근들이나 부임 후 발탁한 ‘本國組’ 또는 ‘新來種’ 관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도 大竹十郎, 宮本元, 山田忠次 등과 같이 총독 교체 후 조선에 잔류하거나 ‘天降’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鮮通’ 관료로 성장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는 宇垣一成과 南次郎 모두 조선을 중시하는 통치방침을 견지하면서 일본 정당정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거나 정계 동향에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192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총독부 관료질서가 유지되었다⁵¹. 총독부가 이 시기 ‘農工併進’의 슬로건 아래 조선개발의 국책적 의의를 부각시키며 ‘비약적인’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총독정치와 총독부 관료질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양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 고참 ‘生拔’ 관료들은 조선개발의 ‘약진’을 성취한 담당주체로서의 자긍심과 식민지관료로서의 집단적 유대감을 견지하면서 농공병진정책·병참기지정책을 추진하였고⁵², 재계인사나 독점자본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의 강화를 의미하는 ‘天降組’ 지배구조의 전면적인 확대였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재계 위원의 절반이 넘는 11명이 ‘天降組’인데, 이와 같은 ‘天降組’ 구성비는 과거 朝鮮産業經濟調查會나 時局對策調查會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⁵³. 이 시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책기업의 증가와 기업합동이 이루어지면서 이 작업에 깊이 관여한 관료의 ‘天降’이 급증하여 ‘天降組’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지만, 주로 관변 금융기관의 장과 국책기업 사장을 맡고 있는 ‘天降組’ 위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 재계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적 인물들이었다.

현직 총독부 관료 수뇌부의 선배 또는 동료가 되는 이들 ‘天降組指導者’들은 통감부 시기에 내선한 초기 식민지관료와 1910년대 내선한 전형적인 ‘生拔’ 관료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관료 재직시기는 물론 퇴관 이후까지 그야말로 삶의 근거를 조선에 두고 있는, 조선통치와 조선사정에 정통한 식민지 지배그룹의 長老·中堅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미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과 산업개발정책을 기획·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⁵⁴, 1930년대에는 관료로서 또는 퇴관 이후 ‘天降組’로서 농공병진정책·병참기지정책을 주도하거나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총독부와 재계 양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관치주의’ 경제지배시스템 구축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당사자들이었다⁵⁵. 國土計劃委員會 위원 구성에서 이와 같은 ‘天降組指導者’들의 전면적인 전진 배치는 독점자본과 긴밀한 유착관계에 있는 기존 ‘관치주의’ 지배질서와 통제시스템의 확대·강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국토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참

51 阿部薰, 앞의 책, 6-8 쪽; 三浦顯一郎, 「宇垣内閣流産」, 『宇垣一成とその時代』, 東京: 新評論, 1999, 196-202 쪽; 御手洗辰雄 編, 앞의 『南次郎』, 480-482 쪽; 岡本眞希子, 앞의 解説, 154-155 쪽.

52 말하자면 이들 관료들은 1930년대 ‘朝鮮通’으로 성장하며 총독정치의 특성과 조선개발정책의 추진을 기반으로 식민지 ‘生拔’ 관료로서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다고 하겠다.

53 朝鮮産業經濟調查會 개최 당시 조선측 위원 중 ‘天降組’는 4명에 불과하였고, 時局對策調查會의 경우에는 9명이었다. 두 기구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川北昭夫, 앞의 「1930年代朝鮮の工業化論議」, 265-266 쪽, 273-275 쪽 참조.

54 木村健二, 앞의 「朝鮮總督府經濟官僚の人事と政策」; 李炯植, 앞의 「政黨内閣期(1924-1932年)の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참조.

기지정책을 강화하는 총독부의 정책적 입장과 그 내면의 이해관계가 집중 반영되고 있었다⁵⁶.

4. 맺음말

조선총독부의 兵站基地政策에 대한 연구는 그간 일본정부와 총독부 사이의 입장 차이나 갈등구조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양자를 ‘日帝’라는 범주에서 무매개적으로 일체화시켜 파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양자는 일체화된 일제 지배권력이고, 또 총독부는 끊임없이 일본정부의 규정을 받는 가운데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병참기지정책이 일제 지배권력 내부의 복잡한 갈등구조를 반영하는 가운데 총독부 독자적인 정책논리를 수반하며 추진되었고, 또한 그 정책논리의 이면에는 總督政治의 특성과 결부된 총독부의 독특한 경제지배시스템의 운영구조와 이해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병참기지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구조가 일제 지배체제의 한 분기를 이룬 제 2 차 近衛內閣의 ‘新體制’ 수립기에 특히 예민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정부의 ‘신체제’ 정책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 과정을 통해 병참기지정책의 성격과 총독부 경제지배시스템의 특질을 친착해 본 것이다. 여러 중요한 관련 사항을 과제로 남기고 있고 또한 분석과 논지 전개도 전체적으로 구제성이 부족한 채 개괄적 정리 수준에 그친 감이 있지만, 이상의 검토에서 戰時國家統制가 경리·이윤·생산통제의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신체제’ 수립기에도 총독부가 ‘朝鮮特殊事情論’과 ‘自治統制’에 입각한 병참기지정책의 개발논리,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경제통제·경제블록 논리를 고수하면서 전시총동원체제에 부응해 나갔던 정책적 입장과 그 내면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몇 가지 음미할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격렬한 갈등을 노정하며 진행된 일본의 ‘新體制’ 수립은 南次郎

-
- 55 이 가운데 병참기지정책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天降組指導者’는 宇垣一成 시기 재무국장으로서 穗積眞六郎과 더불어 농공병진정책을 총괄하였고 ‘天降’한 이후 有賀光豊에 이어 “명실공히 반도 재계의 최고 지도자”로 간주된 食산은행 두취 林繁藏이었다 (嶋元勸, 앞의 책, 20-21 쪽). 이와 함께 재계의 ‘顔役’ ‘世話役’으로 불린 한강수력전기 사장 谷多喜磨, 山崎延吉의 신봉자로서 농촌진흥운동에 열성적이었던 금융조합연합회 회장 松本誠, 산미증식계획의 공적으로 ‘조선산업계의 대인인’이라는 평을 받은 不二興業 사장 三井榮長, 宇垣一成 시기 이래 전력통제와 전기회사 합동에 중심 역할을 한 西鮮合同電氣 사장 今井頼次郎, 宇垣一成 시기 관방심의실 사무관으로서 法制 제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칩무성 국장·차관을 역임하면서 총독부 입장을 대변한 조선광업진흥 사장 萩原彦三 등이 주요 인물이었다 (이상 阿部薫, 앞의 책 및 嶋元勸, 같은 책의 인물 소개 참조).
- 56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는 점이지만, 조선 상공업계의 지도적 인물로서 1932년부터 1939년까지 朝鮮商工會議所와 京城商工會議所의 會頭를 겸하였고 1940년 당시 경성상공회의소 회두였던 賀田直治와, 1935년부터 경성상공회의소 副會頭를 지내고 1939년 賀田에 이어 조선상공회의소 會頭가 된 田川常次郎 (龍山工作 사장)이 국토계획위원회에서 배제된 것도 商工會議所가 재조선 일본인 상공업자와 조선인 상공업자의 合作機關으로 주로 조선에 기반을 둔 中小商工業者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총독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確言한 바와 같이 군부 강경파의 주도 아래 제 정치세력·지배계급의 타협과 절충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혁신성’ 이 현저히 약화된 형태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독부가 의도한 정치적·정책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혁신 세력’ 의 급진적 체제혁신 논리는 그 관념적 본질은 차치하더라도 일본 天皇制 지배질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南次郎의 확신과 같이 일본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논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독부 입장의 관철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의 국책 기조와 円블록 정책에 대한 중속성 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東條內閣의 성립과 태평양전쟁의 발발, 이에 이은 조선총독의 교체 등 일련의 정치정세 추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중속성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要 旨

本研究は、朝鮮總督府が、1940年7月に日本の近衛内閣が推進した‘新体制’樹立政策に対して、深刻な危機感を表している点に注目し、日本政府の‘新体制’政策に対する總督府の対応過程を通じて、兵站基地政策の性格と總督府の經濟支配システムの特質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当時、總督府は、‘新体制’政策の体制革新論理が朝鮮の政治・經濟支配システムの存在様式や兵站基地政策の展望を脅かすものとみなし、その対応策に腐心した。總督府の対応策は、‘朝鮮新体制’の構築と兵站基地強化政策に表れたが、‘新体制’樹立期のこのような總督府の危機意識とその対応過程は、兵站基地政策の構造的特質と緊密な関連性をもっていた。本研究は、このような總督府の危機意識の所在と構造、及びその対応過程に表れる兵站基地強化政策の論理と特質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問題意識と関連して、本研究は特に兵站基地政策の企画・運営主体である總督府の經濟支配システムについて、その実情を把握することに注目した。1930年代の總督府の經濟支配システムの最も大きな特徴は、官僚が強大な権限を行使する‘官治主義’の支配構造の下、總督府と独占資本が非常に緊密に癒着した関係を形成したことである。‘新体制’に対する總督府の危機意識は、このような經濟支配システムの作動構造、その内面の政治的・階級的利害関係と密接に関係していた。従って、‘新体制’に対応して兵站基地政策を強化する總督府の立場と政策論理を深く理解するためには、このような經濟支配システムに対する具体的な実情を把握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本研究は特に1940年10月に總督府が兵站基地強化政策の‘參謀本部’として設置した国土計画委員会を中心にこの問題を考察した。つまり、国土開発計画の論理に基礎を置いた国土計画委員会の設置と兵站基地強化政策は、‘新体制’樹立期の日本の戦時国家統制が經理・利潤・生産統制の領域まで拡大する中であっても、‘朝鮮特殊事情論’と‘自治統制’を固守する總督府の朝鮮開発論理と、その内面の政治的・經濟的利害関係の特質を強く反映するものであった。